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99호
2021.3.29

정책동향

▣ 2020년 지자체 SOC 예산 미집행 약 19조원

▣ ‘영국 2021 예산안’의 건설 정책 동향

시장동향

▣ 글로벌 CEO 76%, “세계 경제 긍정적 기대”

산업정보

▣ Skanska사의 친환경 경영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 도시경쟁력 향상, 질적인 인프라 투자에서 출발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20년 지자체 SOC 예산 미집행 약 19조원

- 도로 개설, 생활형 SOC, 도시재생 관련 사업비 집행 잔액 커 -

■ 지자체 2020년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 집행률 77.3%, 집행 잔액은 8조 670억원

- 지자체들의 2020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현액은 총 35.5조 원으로 이 중 77.3%, 22.4조원이 집행되었으며, 8조 670억원은 집행되지 못함.
 - 집행률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강원, 충북이 69.2%로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경기, 인천, 울산 순으로 나타남.
 - 집행 잔액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2조 1,834억원으로 가장 큰 가운데 서울, 인천, 경남 순으로 나타남.

<표 1> 2020년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지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 잔액
서울	65,819	52,790	80.2%	13,029
부산	24,915	21,057	84.5%	3,859
대구	17,526	14,715	84.0%	2,811
인천	23,191	17,379	74.9%	5,812
광주	10,484	8,355	79.7%	2,129
대전	8,509	7,055	82.9%	1,454
울산	6,430	4,907	76.3%	1,523
세종	1,142	1,045	91.5%	97
경기	83,501	61,667	73.9%	21,834
강원	13,958	9,663	69.2%	4,295
충북	11,205	7,757	69.2%	3,448
충남	13,891	10,435	75.1%	3,456
전북	10,913	8,876	81.3%	2,037
전남	14,864	11,952	80.4%	2,912
경북	19,673	14,832	75.4%	4,841
경남	23,185	17,413	75.1%	5,772
제주	5,736	4,375	76.3%	1,361
합계	354,942	274,272	77.3%	80,670

- 주 : 1) 2020년 12월 31일 일별집행실적 기준이며, 지역 기초 자치단체 총합계임.
 2) SOC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합산금액임.
 3) 예산현액은 예산액, 이월액, 이·전용 등 증감액의 합산금액임.

자료 : 지방재정365.

■ **지자체 2020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집행률 70.0%, 집행 잔액은 10조 5,547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현액은 총 35조 2,263억원이며, 이 중 70.0%, 24.7조원이 집행되었으며, 10조 5,547억원은 집행되지 못함.
 - 집행률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충북이 56.8%로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세종, 광주, 경기 순으로 나타남.
 - 집행 잔액 기준 살펴보면 경기가 2조 1,648억원으로 가장 큰 가운데 경북, 경남, 강원 순으로 확인됨.

<표 2> 2020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지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 잔액
서울	42,647	34,793	81.6%	7,853
부산	12,725	9,356	73.5%	3,369
대구	8,632	6,644	77.0%	1,988
인천	14,623	9,727	66.5%	4,896
광주	6,185	3,807	61.5%	2,378
대전	10,135	7,250	71.5%	2,885
울산	5,613	3,976	70.8%	1,637
세종	3,335	1,914	57.4%	1,420
경기	63,251	41,604	65.8%	21,648
강원	27,679	18,613	67.2%	9,066
충북	17,572	9,982	56.8%	7,590
충남	22,637	15,965	70.5%	6,672
전북	18,709	13,005	69.5%	5,704
전남	25,380	19,004	74.9%	6,376
경북	37,889	25,617	67.6%	12,272
경남	30,234	20,999	69.5%	9,235
제주	5,018	4,460	88.9%	558
합계	352,263	246,716	70.0%	105,547

주 : 1) 2020년 12월 31일 일별집행실적 기준이며, 지역 기초 자치단체 총합계임.
 2) SOC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포함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합산금액임.
 3) 예산현액은 예산액, 이월액, 이전용 등 증감액의 합산금액임.
 자료 : 지방재정365.

■ **지자체 SOC 관련 사업 예산 중 도로 개설·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의 집행 잔액 커**

- 지자체의 집행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들 대부분은 도로 개설 관련 사업,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 안전 관련 사업, 도시재생 관련 사업, 개발 관련 사업 등임.
 - 수도권은 도시고속도로, 국지도 등의 도로 개설 관련 사업의 집행 잔액이 컸으며, 그다음으로 공

원, 주차장,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사업의 집행 잔액이 크게 나타났음.

- 지방광역시도 도로 개설 관련 사업의 집행 잔액이 컸으며, 도시재생 관련 사업,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사업,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의 집행 잔액이 크게 나타남.
- 도지역 역시 도로 개설 관련 사업의 집행 잔액이 컸으며, 하천 정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재해 위험지역 정비, 선형도로 개선 등의 안전 관련 사업,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 등의 집행 잔액이 크게 나타남.

■ 생활형 SOC 사업, 도시재생사업,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사업의 추진 점검 필요

- 2020년 지자체의 SOC 관련 예산(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0.7조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중 52.1조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은 73.7% 수준이며, 집행 잔액은 18.6조에 달하고 있음.
 - 집행 잔액은 예비비 및 자연재해 피해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는 연간 중앙부처 SOC 예산의 약 70% 수준임.
 - 주로 도로 개설 관련 사업, 도시재생사업,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사업, 생활형 SOC 관련 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크게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정부투자가 중요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는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함.
 - 2020년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14.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행 잔액이 크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투자의 효율성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생활형 SOC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각 사업이 가지고 있는 집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 개선이 필요함.

엄근용(부연구위원 · kyeom@cerik.re.kr)

‘영국 2021 예산안’의 건설 정책 동향

- 경기 부양, 산업발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 투자 등 다각적 정책 마련 -

■ 재정 지출 기조로서 건설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예산 편성 및 유인책 마련¹⁾

- 영국은 지난 3월 4일 ‘영국 인프라 은행 신설’,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지원책’, ‘각종 세금 면제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은 크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회복’과 ‘향후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특히, 이번 예산안 내에는 건설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코로나19 일자리 지원(Covid-19 job support)’,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 연장(Stamp duty holiday extended)’, ‘영국 인프라 은행 신설(UK Infrastructure Bank)’, ‘지역사회 지원 기금 마련(Levelling up)’, ‘자유항 지정 및 각종 지원 혜택(Freeports)’, ‘R&D 지원(R&D support)’, ‘현대적 건설을 위한 위원회 설립(MMC taskforce)’, ‘건설 기능인력 지원(Skills)’, ‘중소기업 지원(Support for SMEs)’ 등을 발표함(정책별 세부 내용은 <표 1> 참조).

<표 1> 영국의 2021 예산안 내 건설 관련 지원 정책 및 주요 내용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일자리 지원 (Covid-19 job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대상의 지원 정책 마련 • (근로자)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유지 제도(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 CJRS)를 9월 말까지 연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미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80% 지급 • (고용주) 7월부터 근로자 지원 급여의 일정 비율 부담(7월 10%, 8월부터 20% 부담) • (자영업자) 자영업자 지원제도(Self-Employed Support Scheme : SEISS)를 통해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80%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30% 미만 감소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30%의 지원금을 지급, 또한 수급 대상 인원 역시 증대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 연장 (Stamp duty holiday exten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만 파운드 미만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2021년 6월까지 시행 • 9월 말까지 25만 파운드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리를 미적용하며, 2021년 4월부터 95%의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증제도 도입 계획
영국 인프라 은행 신설 (UK Infrastructure Ban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공공단체와 민간부문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한 전담 금융기관을 신설 • 인프라 은행을 통한 다양한 금융 수단을 마련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 계획
지역사회 지원 기금 마련 (Levelling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Levelling Up Fund, UK Community Renewal Fund, Community Ownership Fund로 구분

1) Building(2021. 3. 4), Budget 2021 summary : What it means for constr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velling Up Fund) 지방 인프라 투자를 목적으로 최대 2,000만 파운드 규모의 사업에 투자, 다만 운송 사업의 경우 2,000만 이상 5,000만 파운드 미만의 사업에도 투자 가능 • (UK Community Renewal Fund) 기술, 지역 커뮤니티, 지역 사업, 고용지원 목적의 투자 • (Community Ownership Fund) 지역 커뮤니티가 지역 내 시설, 자산,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가능
자유항 지정 및 각종 지원 혜택 (Freepor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 감면, 세관 절차 간소화, 각종 정부 지원책, 투자유치 유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재생 목적의 8개 자유항 선정 • 2026년 9월까지 비주거용 구조물의 신규 건설 및 개보수에 관한 적격 지출에 대해 자본 투자공제(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비율을 10% 상향 • 이 외, 자유항 내 플랜트 및 기계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00% 자본 공제, 상업적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 및 재산에 대한 인지세 및 토지세 면제 등 추진
R&D 지원 (R&D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규 공장 및 기계 자산에 투자시 첫해에 한해 투자비용의 130%에 해당하는 공제 혜택 제공 • 혁신적 R&D 사업 지원을 위해 Future Fund 마련하여 3억 7,500만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며, R&D 세금 감면 또한 검토 중 • 탄소 배출 저감 및 저탄소 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솔루션 개발 지원
현대적 건설을 위한 위원회 설립 (MMC taskfo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건설방법(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 MMC)을 적용한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1,000만 파운드의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위원회 신설 • 공공과 민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현대적 건설방법(MMC)의 신속한 채택 및 도입 추진
건설 기능인력 지원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습생, 비숙련공) 202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규 견습생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1인당 3,000파운드 지원(기존 지원금액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 • 또한, 견습생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 파운드의 지원 자금 마련 • (숙련공) 숙련공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이민 후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2021년 여름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 이 외, 2022년 3월까지 엘리트 포인트 기반 비자(Elite points-based visa) 도입 계획
중소기업 지원 (Support for S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내 중소기업이 현지 경영대학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경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12주 과정) 마련 •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인 건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는 무료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최대 5,000파운드 상당의 생산성 향상 목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50% 할인 혜택을 가을부터 제공할 계획
법인세율 상향(이익 공유)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4월까지 법인세율을 25%로 상향 • 전체 기업의 10%만 해당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

자료 : Building(2021.3.4), Budget 2021 summary : What it means for construction.

- 이러한 정부 정책 발표에 대해 영국 현지 건설업계는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전담 금융기관의 설립’, ‘각종 펀드 마련을 통한 사업 투자 및 기업 지원’ 등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탄소 배출 저감 등 녹색 정책’과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²⁾

2) Building(2021. 3. 4), Budget 2021 : industry reacts.

- 이번 영국 정부 예산안 내 건설 관련 주요 정책 중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관점에서 향후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영국 인프라 은행 신설’, ‘현대적 건설을 위한 위원회 설립’, ‘건설 기능인력 지원’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기후 변화 대응 목적의 영국 인프라 은행 설립

- 영국은 이번 2021 예산안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브렉시트(Brexit) 영향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키는 한편, 민간 및 지방정부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기후 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의 설립을 발표함.
 - 구체적으로, 영국 인프라 은행은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민간 및 지방 당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보증, 대출 등 각종 금융 수단 제공을 통해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 외에도 인프라 사업의 개발 및 조달을 위한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영국 인프라 은행의 최대 자본 및 부채 규모는 120억 파운드(한화 약 18조 7,000억원)에 달하며, 최대 보증 규모 또한 100억 파운드(한화 약 15조 6,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표 2>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 목표 및 주요 기능

구분	주요 내용
핵심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Net-Zero Emission) 목표 달성과 기후 변화 대응 • 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주요 활동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운송, 디지털, 물, 폐기물 등 국가 인프라 전략에서 다루는 경제 인프라 지원 • 대학 프로젝트 중 수익창출을 통한 지역 성장 기여가 가능한 프로젝트 지원 • 초기 단계의 기술 지원 및 개발 분야 지원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혼합형 상품, 자본, 민간부문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보증 등 자본 구조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수단 제공 • 지방정부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대출 제공 • 프로젝트 개발 및 조달을 위한 자문 서비스 제공 • 인프라 분야에 관한 기관 투자 활성화 여건 마련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자본 및 부채 규모 : 120억 파운드(한화 약 18조 7,000억원 규모) • 최대 보증 규모 : 100억 파운드(한화 약 15조 6,000억원 규모)

자료 : HM Treasury(2021.3), UK Infrastructure Bank: Policy Design.

- 2021년 봄부터 운영 예정인 영국 인프라 은행에 대해 현지 건설업계는 정부가 인프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 발표한 “Build Back Better :our plan for growth”³⁾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⁴⁾

3) HM Treasury(2021.3), Build Back Better : our plan for growth.

■ 현대적 건설방식 중 하나인 공장 생산 방식의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⁵⁾

- 영국 총리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현대적 건설방식(MMC)의 적용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1,000만 파운드의 정부 지원을 받는 영국 주택부처(the housing ministry) 소관의 위원회(Taskforce)를 설립한다고 발표함.
 - 이번 위원회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현대적 건설방식의 신속한 적용을 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공장생산 방식(Factory-built homes)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현대적 건설·제조 방식을 위한 플랜트 및 장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 유도 방안으로 해당 비용에 대해 추가비용공제(Super reduction)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함.
- 현지 건설업계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친환경 기술 개발’, ‘탄소 배출 저감’ 등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현대화를 통해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건설 기능인력 대상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통한 인력 유입 유도⁶⁾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이번 예산안 마련을 통해 공공 주도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등 경기 부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의 주요 수행인력인 건설 기능인력 대상의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영국 정부 정책은 크게 ‘견습생(비숙련공) 대상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숙련공 유입 유도를 통한 산업 역량 강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우선, 영국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견습생(비숙련공) 대상 정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견습생을 채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
 - 구체적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 신규 견습생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1인당 3,000파운드를 지원하여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지원금인 1인당 1,500파운드(25세 미만인 경우 2,000파운드)와 비교하여 지원의 규모를 확대한 것임.

4) Building(2021. 3. 4), Industry welcomes infrastructure bank but tells government to get on and build.

5) Building(2021. 3. 4), Taskforce to boost construction using MMC.

6) Building(2021. 3. 4), Budget 2021 summary : What it means for construction.

- 이 외에도 영국 정부는 견습생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감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대적 수요가 적은 견습생이 각기 다른 고용주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700만 파운드 규모의 기금을 마련함.
- 다음으로, 숙련공 대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숙련공의 영국 내 이주를 위한 이민 후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2021년 여름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함.
 - 또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영국의 지난해 1월 브렉시트(Brexit) 이후 올해부터 추진 중인 고숙련, 고생산성, 고임금 기반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민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2022년 3월까지 엘리트 포인트 기반의 비자(Elite points-based visa)를 도입할 계획임.

■ 시사점

- 영국 정부가 이번 2021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건설 관련 정책은 ①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효율적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② 향후 경기 회복 및 안정적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나아가서는 ③ 탄소 배출 저감 등 국가 차원의 추진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④ 건설 산업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 기반까지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우리 건설산업에 주는 시사점이 높다고 판단됨. 이에 각각의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영국 정부는 이번 예산안 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 자영업자까지 지원하는 폭넓은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각자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에 따른 고용주 대상의 급여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또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현격히 차등 지급하여 한계기업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한편, 지원금의 수급 대상은 확대하여 다수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 우리 정부 또한 근로자 대상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고용주 또는 기업을 통한 간접적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매출액 등 구체적 기준을 통해 필요 기업에 지원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도의 경기 회복 및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영국 인프라 은행 설립’, ‘자유항 내 각종 기업 지원 혜택’ 등을 통해 투자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적 활동 유도하여 경기 회복 및 안정적 경제 성장을 꾀하고자 함.
 - 특히 ‘영국 인프라 은행’의 설립을 통해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전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마

련한 점은 건설산업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정부 역시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 전담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경기 부양책으로서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건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 대비 투자에 따른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가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충분히 타당할 것으로 이해됨.

● 세 번째로, 영국 정부는 이번 예산안 마련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속 대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 국가 인프라 경쟁력 확보,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상위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여 단기적 목표 달성은 물론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목표 달성까지 꾀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영국 인프라 은행의 경우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민간 및 지방 당국의 인프라 사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인프라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또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Levelling up)의 경우 지역 내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기를 부양함은 물론 지역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최근 우리 정부 또한 건설 투자 확대 기조로 돌아서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및 관련 정책 마련 시 지역 균형발전,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인프라 경쟁력 확보 등 국가 목표와 다각적 연계를 통해 일거양득(一舉兩得) 이상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마지막으로, 이번 영국 예산안 내 건설 관련 정책은 경기 부양책 및 국가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역할과 함께 건설산업 차원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지속적 국가 주요 산업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는 R&D 사업에 대한 각종 혜택 마련, 현대적 건설방식 도입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 건설 기능인력(숙련공 및 비숙련공) 지원 정책 마련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미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특히 현대적 건설방식(MMC)의 신속한 적용을 목표로 하는 위원회의 설립은 주택공급이라는 특정 분야와 목표를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 자금까지 제공하여 현대적 건설기술 개발, 주택공급 등 측면의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도입이 미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목적의 위원회 마련시 이러한 영국의 현대적 건설방식 도입 위원회를 벤치마킹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적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김화량(부연구위원 · hr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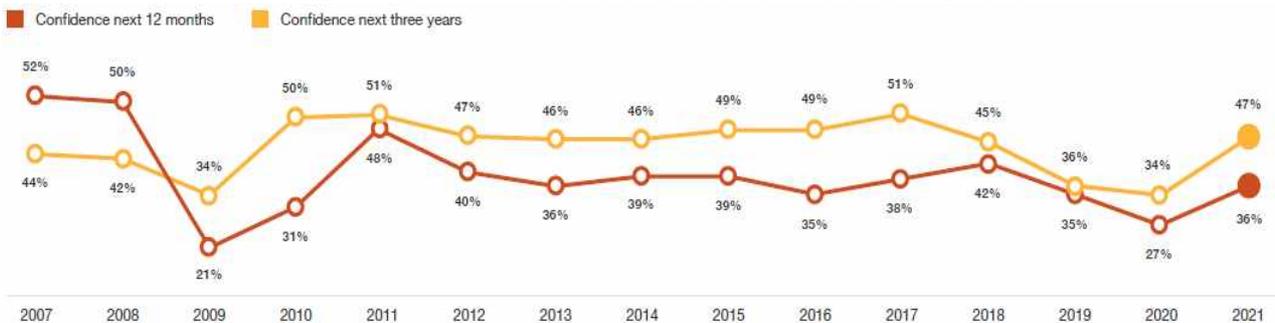
글로벌 CEO 76%, “세계 경제 긍정적 기대”

- PwC 글로벌 CEO 설문,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률 기록 -

■ 글로벌 CEO 505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1년 세계 경제에 대해 긍정적 응답 76%⁷⁾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지난해 -3.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8년(57%) 이후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률을 기록함.
 - 조사대상 CEO의 36%는 향후 12개월 동안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3년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7%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음. 과거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글로벌 CEO의 세계 경제 전망과 실제 경제 성장률은 궤를 같이함.
 - 글로벌 CEO들은 급반등하는 경제성장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경영 전략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꼽음. 또한, 산업별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달랐던 만큼 기술, 파이낸스, 판매가 혼재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1> 글로벌 CEO의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 추이



자료 : PwC(2021),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 향후 경제 상황과 기업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의 52%가 ‘코로나19 재확산과 다른 헬스 이슈의 발생’을 2021년의 첫 번째 위협요인으로 평가함.
 - 다음으로 사이버 위협(47%), 과잉 규제(42%), 정책의 불확실성(38%), 불확실한 경제성장(35%), 포퓰리즘(31%), 세금 정책의 불확실성(31%), 기후변화(30%), 가짜 정보(28%) 등의 순임.
 - 위협요인 중 ‘사이버 위협’, ‘세금 정책의 불확실성’, ‘가짜 정보’에 대한 글로벌 CEO의 평가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12~13%씩 증가함.

7) PwC(2021),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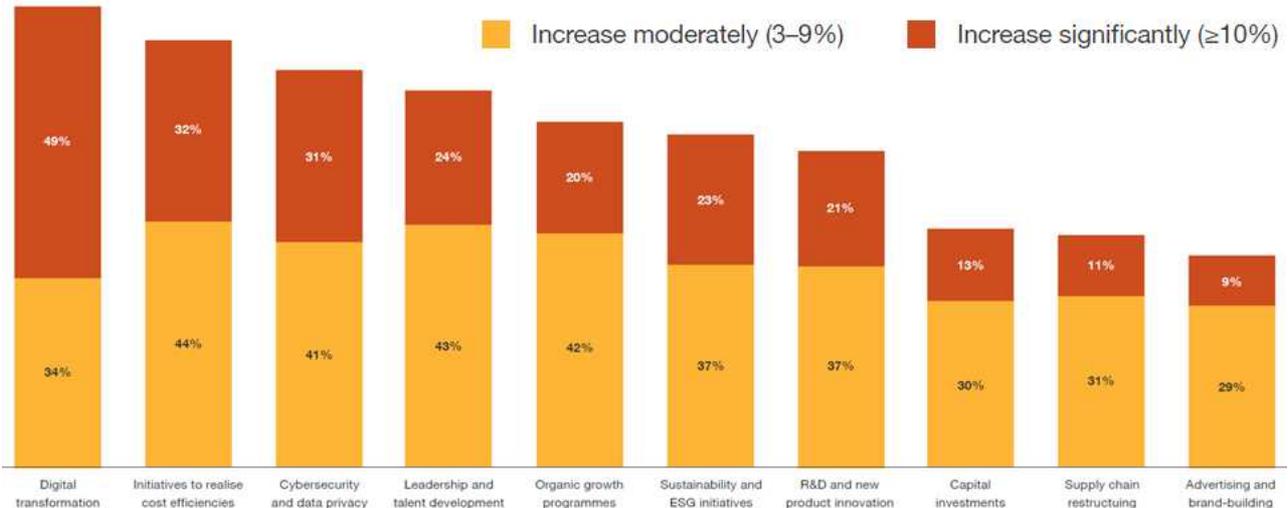
- 반면에, '기후변화'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6%p 증가한 30%를 기록해 최근 탄소 제로 정책의 본격화 등의 동향과는 다른 평가를 받음. 조사대상의 60%는 '기후변화'를 비즈니스 전략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위협과 가짜 정보 등에 관한 관심과 우려의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림 2>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CEO의 49%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를 10%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함. 3~9%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응답도 34%로, 향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의 83%에 이룸.

- 이외에 글로벌 CEO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76%), 사이버안전 및 데이터 보호(72%), 리더십 및 역량 확보(67%), 기업의 유기적 성장 프로그램(62%) 등의 분야에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 코로나19에 따른 분야별 증장기 투자계획



자료 : PwC(2021),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경제는 급반등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기업의 선제 대응 필수

●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CEO들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와 모든 산업의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대유행의 종식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 성장의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디지털 전환과 가격 경쟁력 확보 등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과 수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평가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Skanska사의 친환경 경영

- 환경경영 선진기업 Skanska, 2045년까지 순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 -

■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 및 4대 탄소중립 추진전략 추진

- 2020년 10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⁸⁾ 달성을 국가 목표로 천명하고, 12월 7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함.
 -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함.
 - 2050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연계해 국토교통부도 최근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는 등 향후 건설산업 내 탄소중립, 즉 순 탄소배출 제로 수준 달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전망이다.
 - 건설기업 측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배출량만큼을 상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점차 중요해질 전망이다.

■ Skanska사, 환경경영의 최고 선진기업 중 하나로 평가

- 해외 선진 건설기업 중에서는 Skanska사가 환경경영의 최고 선진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1887년 스웨덴에서 시멘트 회사로 시작한 Skanska는 1990년대 들어 M&A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ENR Top 10위권에 위치함.
 - Skanska는 환경경영 측면에서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1997년부터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2002년부터는 윤리경영, 사회공헌, 보건 및 안전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 2000년에는 전 세계 모든 사업부를 대상으로 환경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8)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순배출 영점화(net zero), 탄소제로(carbon zero)라고도 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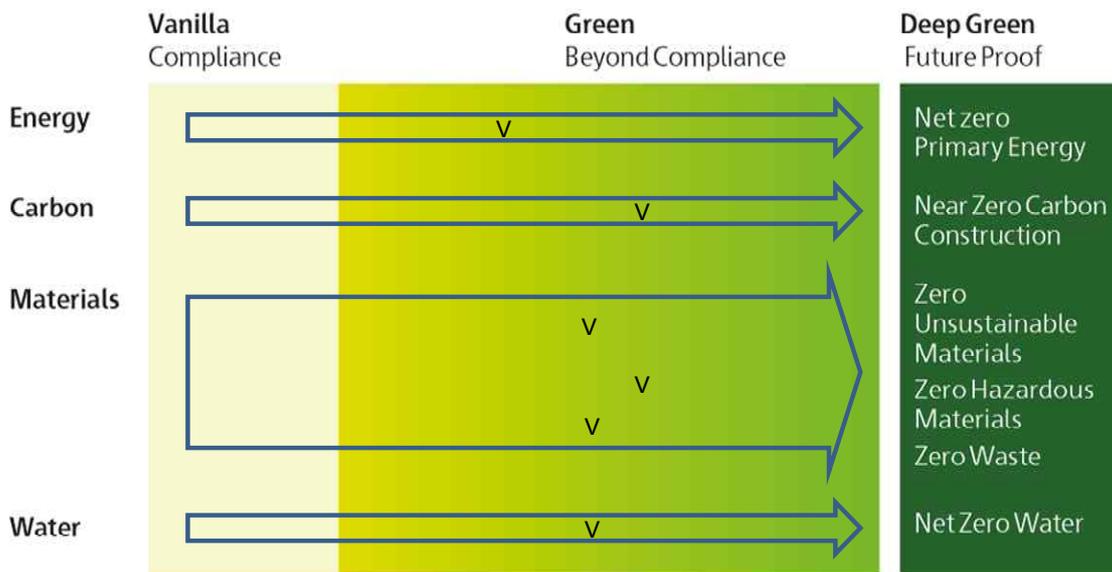
■ Skanska사의 환경경영 목표 : 2045년까지 순 탄소배출 제로 수준 달성

- Skanska는 에너지, 탄소, 자재, 용수의 4가지 영역과 관련한 배출량, 사용량 등의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을 환경경영의 목표로 삼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45년까지 순 탄소배출 제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정부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국가 목표로 설정한 것보다 더 진취적 목표임.
 - 더구나 Skanska 내부 가치사슬뿐 아니라 협력회사의 가치사슬, 그리고 프로젝트 준공 이후 사용 단계에서의 가치사슬도 포함해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정함.

■ 친환경 경영 추진 도구 'Color Palette' 활용

- Skanska는 환경경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09년 도입된 Color Palette라는 도구를 활용해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친환경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 Color Palette라는 도구를 활용해 모든 프로젝트의 친환경 수준을 바닐라(Vanilla), 녹색(Green), 짙은 녹색(Deep Green)의 3단계로 구분함.

<그림 1> Skanska의 Color Palette



주 : v 표시는 현재 기업의 수준에 대한 예시적 표시임.
 자료 : Skanska 홈페이지.

- 바닐라 단계는 건설 프로세스와 건설상품이 환경 관련 법규 및 표준을 준수하는 영역으로 친환경

경영의 출발점임.

- 녹색 단계는 법규 및 표준을 초과 달성하는 영역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존재하는 단계임. 짙은 녹색 단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a near-zero impact level)의 단계를 의미함.
- Skanska는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Color Palette를 활용해 평가하는데, 친환경 경영 추진 도구인 Color Palette의 짙은 녹색(Deep Green) 영역에 모든 프로젝트가 위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녹색 및 짙은 녹색 단계에서 그룹 전체 건설 매출의 46%를 달성했으며, 이는 2017년 43.4%에서 3%p 가까이 향상된 성과임.

■ 그린 파이낸싱(Green Financing)

- Skanska는 자사의 환경경영 경쟁력을 자금조달에도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구체적으로 그린 채권(green bond), 그린 대출(green loan) 등 그린 파이낸싱(Green Financing)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있음.
- Skanska는 환경경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4년 처음으로 그린 채권을 발행했음.
 - 2018년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사업을 위해 10억 스웨덴 크로나(SEK)에 해당하는 제2차 그린 채권을 발행했으며, 나스닥의 지속가능한 채권시장(Nasdaq Sustainable Bond Market)에 상장함.
 - 그린 채권(green bond)은 해당 채권 발생으로 조달된 자금을 LEED, BREEAM, DGNB 또는 Nordic Swan Ecolabel과 같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 유통되는 채권임.
 - Skanska가 그린 채권을 통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LEED의 플래티넘(Platinum) 혹은 골드(Gold) 수준의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린 채권 외에도 Skanska 금융사업부는 2017년 4개 은행과 협력해 20억 스웨덴 크로나(SEK)에 달하는 그린신용 한도를 설정하였고,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시했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금융사업부가 관리하는 부채는 총 43억 스웨덴 크로나(SEK)에 달하는데, 이 중 85%는 그린 채권, 그린 대출 등 녹색 금융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홍일(연구위원 · hilee@cerik.re.kr)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주관기관	주요 내용
3.5	국토교통부	• 공공자가주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 경제금융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3.10	국토교통부	• 제60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소위에 기술경영연구실 손태홍 연구위원 참여
3.16	서울특별시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 자문회의에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 참여
3.25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령 개정안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에 김영덕 연구본부장 참여

주요 발간물 및 활동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연구 보고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여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에 따라 노후 인프라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나,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함. • 「시설물안전법」은 성능 중심의 유지관리 체계는 확립되었으나, 시설물의 체계적인 자산관리의 관점에서는 한계를 가지며, 「기반시설관리법」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틀을 마련하였으나,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이, 구체성이 부족한 가이드라인 성격임. • 미국, 영국, 호주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교통 분야 재정혁신 법안」(TIFIA), 민간 활동 채권(PABS) 등의 지원을 통해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성 개선과 더불어 사용자비용 저감을 유도하고 있음. - 영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전체 수명과 성능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계획, 조달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집산화 등으로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는 2016년부터 우선 투자되어야 하는 인프라 우선순위 목록(Infrastructure Priority List)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호주와 같이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체계는 안전에 중점을 둔 체계로 경제성 등을 고려한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삭제된 노후 인프라 사업유형인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ROO(Rehabilitate-Own-Operate)/RTL(Rehabilitate-Transfer-Lease) 등을 재정립시키는 것이 필요함. ② 노후 인프라 평가를 위한 시설물의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설정 필요함. ③ 노후 인프라는 과거 국민적 수요에 의해 투자가 이루어져 현재 사용되는 시설물로, 시설물의 존치가 결정되면 투자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불필요함에 따라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함. ④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가치에 대한 경제적 검토가 불필요함에 따라 타당성 분석시 토지비 제외가 필요함.

도시경쟁력 향상, 질적인 인프라 투자에서 출발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로서 다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 후보 선출부터 뜨거웠고, 후보들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부동산 문제 등 시민들의 관심사와 이슈들이 많아 안전·보건, 지역경제, 주택정책 등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대표적인 평가지표로서 그 나라 대표 도시의 경쟁력 수준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과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의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현재 서울의 경쟁력은 어떠한가? 서울은 외형적으로는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할 정도로 한국의 대표 메트로폴리탄으로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의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서울 서베이 사회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2016년 6.97에서 2019년 6.84로 하락했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 세계 12위, 국민총소득(GNP) 세계 11위 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영국 EIU의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전 세계 140개 도시 중 5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머서(Mercer)의 '삶의 질 조사'에서는 전 세계 231개 도시 중 77위에 머물러 있다. 삶의 질 조사는 2012년 75위에서 더 떨어진 순위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AT 커니(Kearney)의 '2020 글로벌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글로벌 도시지수는 2015년 11위에서 2020년 17위로 상위 30개 도시 중에서 그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 서울의 현재 모습이다. 서울의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

상의 순위가 하락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의 행복도가 낮아지고, 삶의 질이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최근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고용에 대한 만족도는 9.2%, 주거는 13.0%, 재정에 대해서는 17.6% 등으로 나타났고, 향후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안전분야에 대해 53.3%, 주거 분야는 42.0%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민들의 안전한 사회환경과 편안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도시의 인프라는 매우 중요하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 재정적 만족을 위해선 도시의 안전 및 방재 인프라 그리고 경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2030년, 2040년을 목표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안전 및 방재 인프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경제 및 문화·예술 인프라의 양적·질적 확충이 요구된다.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서울, 부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인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들, 미래는 물론 현재에도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많이 나와서, 금번 보궐선거가 서울,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주경제, 2021.3.22>